

[ 종합 ]

전남도의원 의정비  
年 3,960만원

전남도의원 의정비가 연간 3천 96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에 지급하는 연봉을 의정활동비 1천 800만원과 월정수당 등 모두 3천 960만원(월 330만원)으로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 통보했다. 이번 의정비 지급결정 기준은 전남도의원비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봉급생활자 가계비 상승률,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남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박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 남구 의원 의정비  
年 2,766만원

광주 남구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구의원의 보수를 연 2천76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 구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120만5천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30만5천원을 받게 된다. 심의위는 구의 재정력 지수와 물가상승률, 재정실정, 구의원의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네가지 안으로 집약,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줄기세포 조작’ 사건  
항우석·김선종 기소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항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은 항 전 교수 등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난자를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연구원과 관련해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 외에 다른 혐의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논문 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어 학계에 미칠 파장과 법적 논란 등을 우려, 대검과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논문조작 처벌 여부를 결론짓기로 방침이다. 검찰은 논문 조작과 별도로 민간후원금을 포함한 모두 369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중 이미 집행된 2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해 항 전 교수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공천비리 파문 선거정국 ‘소용돌이’

검찰 ‘공천헌금’ 제공자 3명등 소환 조사  
與 대형비리 폭로 예고...한, 대책마련 부심

5·31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터져나온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선거정국이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한나라당 김덕룡·박성범 의원측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데 연루된 3명에게 이날 중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덕룡 의원 부인에게 올 2월부터 구청장에 걸쳐 4억 4천만원을 갖다준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희망자 함모세 부부와 올 1월 박성범 의원 부인에게 미화 21만달러 및 1천만원 다발이 든 케이크 상자를 제공한 장모(여)씨 등 3명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한나라당은 김덕룡, 박성범 의원 공천비리 의혹에 이어 당세가 강한 수도권과 영남지역

에서도 공천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초긴장 상태에서 파문확산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한나라당 중요 인사의 개인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공천파문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우리당이 폭로하게될 중요인사의 개인비리가 ‘메가톤급’일 경우,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텃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선거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공천비리 전파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퇴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공천파문은 상반계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기아차 ‘뉴카렌스’ 신차 발표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뉴카렌스’ 신차 발표회를 갖고 2.0 LPI엔진과 디젤엔진을 얹은 2.0 VGT 엔진 등 두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국내 최초로 CUV(크로스오버유티리티차)를 기본 콘셉트로 한 신개념 차를 연비와 출력이 각각 10%씩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광우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 조남홍 기아차 사장, 김준겸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장, 조남일 기아차 광주공장장,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北에 여수엑스포 공동개최 제안”

우리당 정동영의장 “통일장관과 협의...장관급회담서 논의”

정부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공동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4일 목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개최 여부가 확정될 여수엑스포가 북한과 공동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에 제의할 예정”이라며 “이중성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북한이 세계박람회기구(BIE)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가입을 권고한 뒤 공동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 엑스포 조직위는 자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의한 뒤 정부에 공동 개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5% 이상을 우리 아들, 딸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재는 지자체 수입의 0.2%만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대형 청사를 짓는 등 주로 토목공사에 주력해왔다”고 지적한 뒤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하동등안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는 강령교를 펼쳤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세를 몰아 우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표식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 것. 우리당은 이날 전남지사 후보로 서범석 전 교육부차관을 확정된 뒤 전남서부권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과 영동연 사무총장, 강봉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 의장은 매마침 터져나온 한나라당 발대공천 비리 의혹을 호재삼아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지방권력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에 맞서 지방권력 교체에 이바할 당은 우리당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뒷발’을 적극 파괴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설

운동권 퇴조하는 大學街, 이젠 실력 갖추라

올 서울대 총학생회장엔 비운동권 학생이 당선되는데 이어 연세대 고려대등 주요대학에서 운동권 총학생회의 과격시위를 반대하는 ‘일반’학생들의 집회가 벌어졌다는 예사롭지 않은 변화다. 서울대 새 학생회장은 한총련 탈퇴, 교내광장 내 집회금지등 철저비정치적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비운동권 후보가 학생회장이 된 건 1999년과 2003, 2004년에 이어 근래 이만이 네번이다. 지난해 삼성 이근희 회장 명예박사수여식 소동엔 이어 올 학기초 교수 역류 사태를 초래한 고려대 총학생회는 일반 학생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13일에는 일반학생들이 총학의 폭력시위를 반대한다는 교내집회를 열기도 했다. 등록금 인상 무효를 주장하며 대학본관을 점거 중인 연세대 총학생회에 대해서도 일반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의 정렬카드엔 ‘90년대 개념으로 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부작용부터 견제해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개혁의 과제로 꼽혀온 주민소환제는 야당들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나 다음 회기때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취지는 좋지만 주민소환을 악용한 정치공세가 벌어질 수 있고 당선자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선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비리·추문의 당사자가 될 때 소정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박탈하는 소환제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더욱이 광주에서는 지난 2003년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주민소환 조례제정’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2004년 4월 시의회가 전국에

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거까지 했다. 그러나 이조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주민소환제가 부작용을 이유로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정밀히 갖추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를 해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비리 지방정치인들을 목격해왔다. 민선 1기 이후 기소된 단체장만 161명에 이르고 지방의회 의원은 무려 763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주민소환제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 제도의 당사자가 될 때 소정의 의결을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소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日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탐사 계획

〈배타적경제수역〉

정부, 日대사에 강력 항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해저 수로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타국의 EEZ내에서 해양 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5분 ▲북위 39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북위 38도 20분, 동경 136도 05분 ▲북위 36도 27분, 동

신 건·임동원 前국가정보원장 보석 석방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법원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장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두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구속 기한(6개월)이 다음달 중순 끝나지만 그 이전에 증거 확인 등 중거 절차를 마무리짓기가 어려워진 데다 피고인들의 불법감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동원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1월 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차라리 이방법이 나을성싶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부진

환율·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으로...5분기만에 최저치

삼성전자가 환율 하락과 낸드 플래시, LCD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2004년 4.4분기 이후 5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4분기 매출액이 13조9천600억원, 영업이익 1조6천100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8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같은 영업이익은 전분기(2조1천400억원)보다 무려 24%나 감소한 것이며 2004년 4분기 1조5천300억원을 기록한 이후 5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도 전분기보다 10%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분기대비 27%나 급감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이 1·4분기중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과 급격한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 4조3천3백억원, 영업이익 1조1천2백억원을 기록, 전분기보다 15%, 31%가 각각 줄었다. 정보통신 부문은 1.4분기중 휴대폰 판매량이 총 2천900만대에 달해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7% 감소한 4조5천900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23% 증가한 4천6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LCD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부진과 패널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매출액이 2조6천8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 줄었고 영업이익도 1천10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고침=본보 20일자 1면 톱 기사 제목 ‘수백억 피해’ LG칼텍스 등 손배소 움직임 중 ‘LG칼텍스’는 ‘GS칼텍스’의 잘못된 표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